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위해 검찰권 행사 절제

■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안

법무부가 8일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라는 이름으로 검찰 개혁안의 청사진을 내놨다. 조국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0순위'로 꼽은 검찰 개혁 시책을 담은 것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녹아들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검찰권을 절제했을 때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법의 중요 가치인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에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이 담겨 있다. 피의자를 지나치게 압박해 수사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력 약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시스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의견은 이번 검찰 개혁안이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나 권리 구제에도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닿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의 고의적인 수사 지연 및 소환 불응에 엄정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출석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사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압박수사' 지양 긍정 평가

'별건수사' 등 개념 불분명

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의 한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형사사법에 따른 정의구현도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 지시 1주일 만에 공개소환 폐지, 심야수사 제한 등 개혁안을 급하게 발표한 데 이어 법무부마저 경쟁하듯 서둘러 이날 안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인권향상과 더불어 수사력 약화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날 '신속 추진과제'로 거론된 사항들의 시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 방안"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감사 강화 방안" 등은 우선 시행하고,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은 연내추진 과제로 전환해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추가 검토와 함께 몇몇 수사 관행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적절한 수사 관행으로 지적된 '장시간 조사'와 '별건수사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8시간을 기준으로 장시간 조사 여부를 구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는 의견이 없지 않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법무부가 기준으로 삼은 8시간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한 것이라면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대검의 검찰 개혁안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별건수사 역시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

없이 해석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 개혁 시책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 등

에서 엄중한 검찰수사를 요청했던 조 장관이 정작 가족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일 때 검찰권 절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가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조 장관은 대통령령 개정 등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검찰 개혁 방안은 본인의 가족 관련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더라도 조 장관의 개혁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발표 시기를 조율해야 했다. /연합뉴스

한전공대 설립 놓고 민주-한국당 치열한 공방 예상

■ 내일 전남도 국감 이슈

한빛원전·인구조별 저출산

여수산단 환경대책 등 쟁점

오는 10일 열리는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전공대와 한빛원전, 인구조별 위기,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전공대의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국정감사 뿐 아니라 향후 이뤄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10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 행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이들 의원들의 요구자료

170여건을 바탕으로 예상쟁점(128건) 및 핵심쟁점(42건)을 뽑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한전공대의 경우 설립에 부정적 입장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하기로 한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광대훈 의원이 한전공대 설립에 한전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전력 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전력 산업기금을 활용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나주 한전 본사를 찾아 한전공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10여명의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11일 나주 한전에서 예정된 국회 산자위의 한전,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의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전의 수천억원의 적자를 거론하며 한

전공대 설립 반대를 주요 이슈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광주·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설립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적극 내세울 예정이다. 앞서 한전공대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와 광주·전남 5개 상공회의소, 나주혁신산단 입주기업 협의회 등도 '한전공대 설립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바 있다.

한전공대 외 인구조별·저출산 고령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취업·고용난 등도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자료를 요구해 관련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이슈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자치단체가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말 '검찰개혁' 마지막 집회...광주 시민들도 상경

오늘 광화문 광장서

보수단체 '조국 퇴진' 집회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에 맞서 토요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네 번째 주말 집회가 열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9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를 연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이 총괄 본부장을 맡아 지난달 20일 출범한 이 단체는 개천절인 3일에 이어 두 번째 도심 집회를 나선다.

이 단체는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신고 인원은 2만5000명으로, 주최 측은 개천절 집회(주최 측 추산 300만명)보다 적은 10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은 한글날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진 않았으나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 장관 구속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 후 1000명가량이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12일 서초동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한글날 집회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로 세종대로, 사직로, 효자로, 자하문로 등 도심권에서는 혼잡이 예상되며,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행진 상황에 따라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지지를 내건 반대 측 집회는 주말에 예정돼 있다. 사법적

폐정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9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 지난달 21일, 28일과 이달 5일에 이어 네 번째 열리는 주말 집회로, 참가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 장관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칠 계획이다.

지난 주 집회에는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 1.1km 구간 8개 차선, 동서 1.2km 구간 10개 차선에 인파가 운집했다. 사회자는 300만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도 광주, 강릉, 원주, 안동 등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합류한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 이후 예정된 집회는 없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